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### 오바마 행정부 건강보험개혁법 첫 위헌 판결

-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.
  -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헤리 허드슨 판사는 12월 13일에 건강보험개혁법의 내용 중 ‘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는 벌금을 내도록 한’ 조항은 의회에 허용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결함.
    - 판결문을 통해 ‘건강보험도 금융상품이며 개인에게 상품의 의무적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다’는 위헌 판결 취지를 밝힘.
  - 단, 허드슨 판사가 위헌이라고 본 것은 가입 의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뿐이며 이 법안의 나머지 내용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  - 올해 3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지금까지는 모두 합헌 판결만이 내려진데 반해 이번 판결은 이 법안에 대한 소송 중 처음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라는데 귀추가 주목됨.
-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이 이 법안의 위헌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판결에 만족감을 나타냄.
  - 쿠치넬리 총장은 ‘이번 소송의 위헌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나 헌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세운 것’이라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단체 또는 임원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한번 비판함.
-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법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.
  -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‘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합헌이라고 믿고 있다’며 항소할 뜻을 비쳤고,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.
  -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2014년까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강보험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힘.

(Wall Street journal, 12/13)